취소 인쇄하기

21개 대북인권단체, UN에 “통일부 사무검사 규탄” 서한

등록 2020-07-19 오후 5:27:31
수정 2020-07-19 오후 5:27:31
김미경 기자

[이데일리 김미경 기자]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유엔(UN)과 유럽연합(EU) 등 국제기구에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계획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다.

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이슈화하겠다는 것이다.

전환기정의워킹그룹(TJWG)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1개 단체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(EU) 및 각국 외교관계자 등에 “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”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.

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, 북한이탈주민단체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(사진=뉴스1).

이들은 서한에서 "통일부가 대북전단(삐라) 건을 계기로 전단과 무관한 단체들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"며 "이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한 단체와 기타 민간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과잉조치"라고 비판했다.

그러면서 "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"이라면서 "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"고 요청했다.

한편 지난 16일 통일부는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 통일부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.

ⓒ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– 상업적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